

삼성의 미래, 한국의 미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1.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개발



“Making a Miracle”

Robert E. Lucas, Jr., a Nobel laureate economist, calle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 miracle** in his *Econometrica* paper in 1993.

- 1960년에, 한국과 필리핀은 생활수준 및 인구규모 및 인구분포, 취학률(schooling), 수출품목 등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1960년부터 1988년까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1년에 약 1.8%씩 성장한 반면, 한국은 1년에 약 6.2%씩 성장하였음. 그 결과 1988년에 한국의 1인당 소득은 필리핀의 약 3배로 성장함.
- 경제발전은 금융시장, 인구 규모와 구조, 도시화와 산업화, 인적자본축적 등에 근본적 변화를 수반했음.

한국의 경제발전과 구조변화

한국경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1960 - 2010)

	Year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인구 ('000)	24,954	31,435	37,407	43,520	46,136	48,876
도시화 (%)	28.5	43.1	60.1	74.1	89.7	83.0
1인당 GNP (USD 1996)	80	243	1,597	5,883	9,770	-
1인당 GDP (USD 2000)	1,109	1,879	3,462	6,390	10,546	16,372
GNP에서 농업의 비중 (%)	36.5	50.4	14.4	8.7	4.6	-
GDP에서 농업의 비중 (%)	29.97 (in 1967)	29.25	16.17	8.94	4.63	2.56
GNP 대비 수출 (%)	16.8	15.2	34.3	28.7	39.9	-
GDP 대비 수출 (%)	11.2 (in 1967)	13.63	32.06	27.95	38.56	52.37
GNP 대비 국내총투자(%)	12.8 (in 1962)	26.6	32.0	37.1	28.2	-
GDP 대비 국내총투자 (%)	22.95 (in 1967)	25.36	31.81	37.51	30.56	29.14
국내총투자 대비 외국인 저축 (%)	83.3 (in 1962)	34.7	35.7	2.4	-8.4	-
실업률(%) (노동참여율(%))	11.7 (50.1)	4.5 (57.4)	4.1 (59.0)	2.4 (60.0)	4.1 (61.0)	3.6 (60.3)
학교 등록율(고등교육)(%)	NA	7.1 (in 1971)	12.8	36.8	78.3	103.11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

-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
 - 주식회사 대한민국 (Korea Inc.)
 - 금융시장과 부품시장의 **missing institutions**를 효과적으로 대체함.
 -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 효율적 전략.
- **경제발전은** 금융시장, 인구 규모와 구조, 도시화와 산업화, 인적자본 축적 등에 **근본적 변화를 수반**했음.
 - 경제발전의 결과 금융시장과 부품시장의 성장으로 missing institutions 문제는 해소됨.
 - 모방보다 혁신에 의한 성장이 더 중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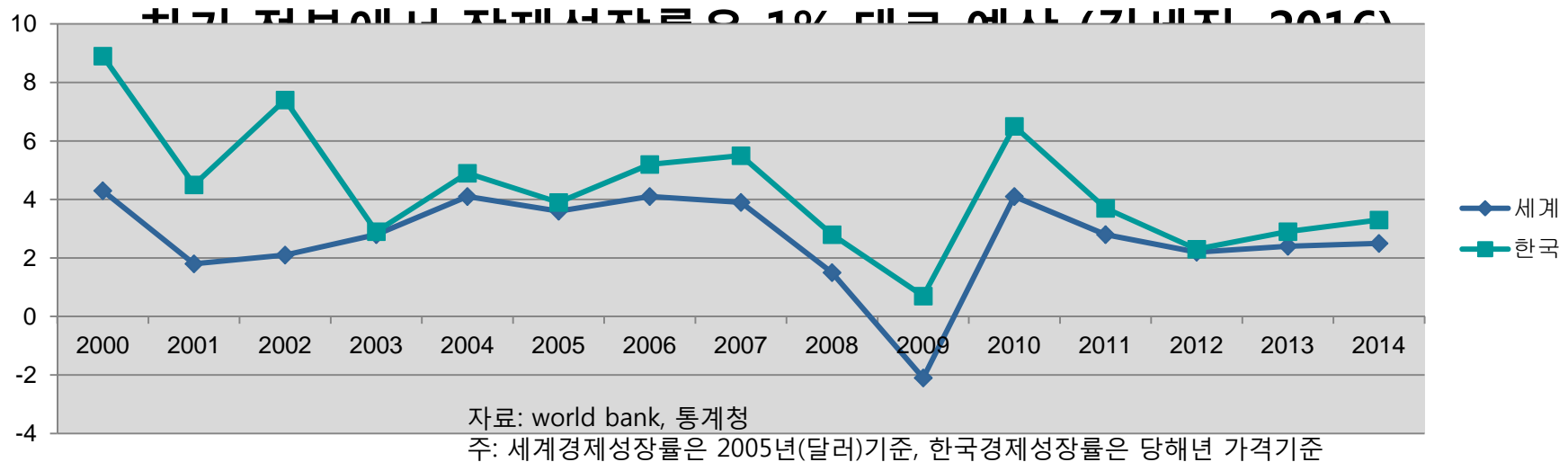
2. 한국경제의 현황



저성장의 고착화

▶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

- 2015년 성장률 2.6%로 집계 (재고의 성장 기여도 1.1%p)
- 2016년 성장률 2%대 전망. (1분기 0.5, 2분기 0.8% 성장에 그침)



제조업 위기와 취약한 중간재산업

-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GDP의 30%, 2013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하락**
 - 2012년도 이후 무역특화지수는 소폭 하락, 비IT산업에서 하락이 뚜렷함.
 - 2011년 이후 제조업 매출액증가율과 수익성도 하락 추세.
- 제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의 생산 비중 증가** (현대경제연구원, 2011)
 - 1993년 38% -> 2000년 39% -> 2008년 43%.
- 그러나 **핵심제품 및 기술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기술수준이 선진 기업들에 비해 **취약하며 기술개발 노력 및 투자도 크게 부족** (산업연구원, 2007).
- 특히 **소재산업은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기술 비교우위 유형의 소재 수출은 22.1%에 불과.



한계기업과 은행 부실

➤ **만성적 한계기업** (2005년 이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

(한국은행, “2015년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 2014년에 전체 대기업 수의 10.6% 차지
- 제조업에서는 조선과 철강업종에서 비중이 크게 증가

➤ **한국 은행의 생산성은 90년대 초반 수준** (김세직·홍승기, 2015)

- **부실채권 처리비용이 은행생산성 하락**의 주요인.
- 2012-13년도 이후 은행생산성 하락.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arket & Government

재벌과 구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속으로 도덕적 해이

혁신의 부재

-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경제**
 - R&D 지출 수준과 비중은 높으나 (GDP 대비 R&D 지출 세계 1위, R&D 지출액 세계 6위) 낮은 혁신 성과 (144개국 중 24위, 2014-15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2015년 기준, 정부 연구소 보유 특허 중 71.6%는 '장롱 특허'(2013년 66.4%, 2014년 68.6%)
 - 만연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 **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조건 (Aghion and Howitt 1992)**
 - **자본시장**의 발달, **재산권 보호** 제도 확립이 필요.
 -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 장벽**이 없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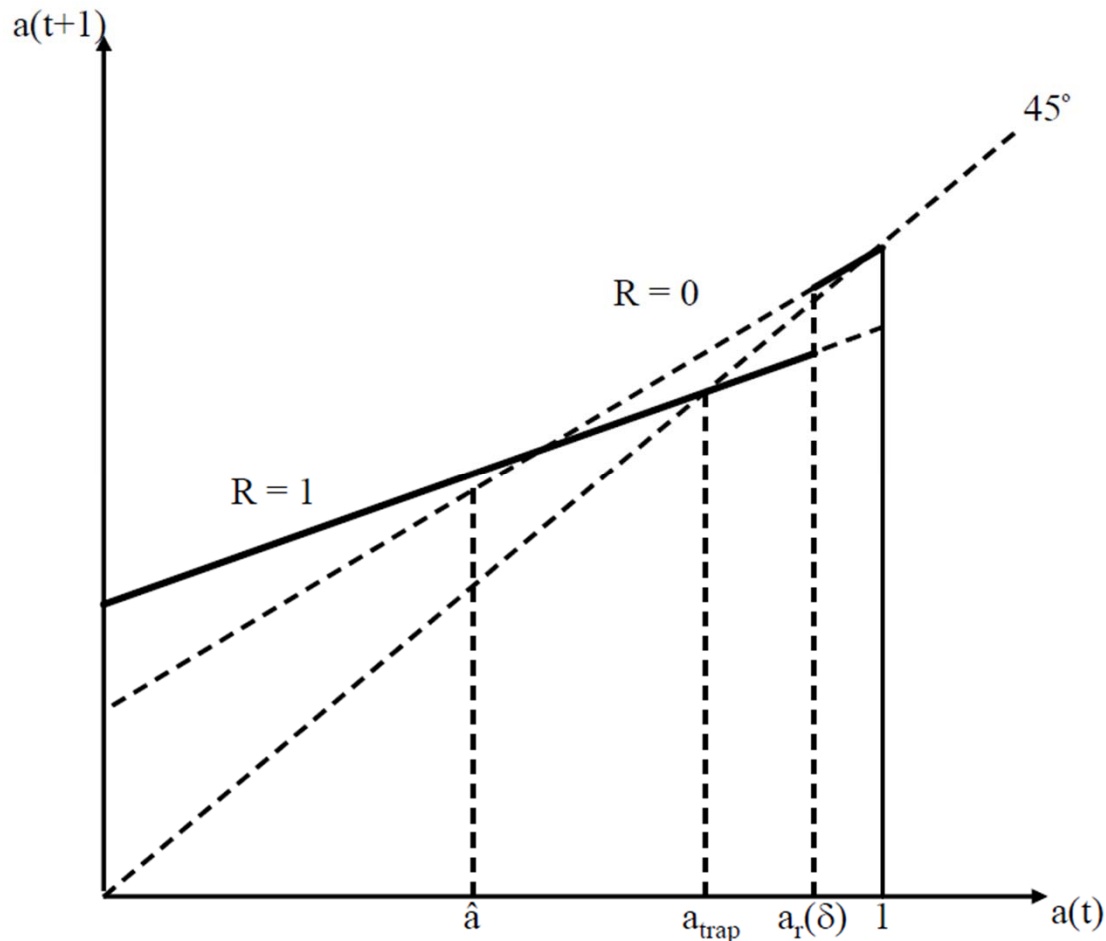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경제는 여전히

- 낮은 수준의 재산권 (64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 (68위)
- 자본시장의 미발달과 관치금융 (VC 접근성 107위, 은행건전성 120위)
-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보호 119위, 이사회 효과성 126위)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

- 모방과 임금경쟁력에 기초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추격형 발전전략은 한계에 봉착함.
- **혁신형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부주도 정책은 양립할 수 없음.**
 - 기술진보의 불확실성과 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모두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서 상용화될 기술을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예: 영화 Back to the Future II에서 예상한 flying car, Mr. Fusion, hoverboard, 자동으로 신발끈을 매는 신발, 주유소에서 일하는 로봇, 우편 팩스 등은 상용화되지 않았음.
 - “정부관료-재벌기업-언론-전문가그룹”의 **기득권 카르텔** 형성.
-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은 혁신이나 사업기회조차 빼앗는 부작용도 유발함.
- **재벌 세습**은 owner risk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 진입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더 어렵게 함.
 - 빌 게이츠와 MS.

장기침체에 빠질 개연성



- Acemoglu, Aghion and Zilibotti (2006)에 의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술 프론티어에 근접하게 되고, 기술 프론티어에 접근하면 모방형 전략보다 혁신형 전략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기존 체제의 기득권자들로 인해 혁신형 전략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음
- **개도기식 발전전략과 경제 구조의 대변혁이 필요**

남미형 싸이클로 전환 가능성

-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의 차이.
 - 둘째, 중견재벌의 연쇄 도산 또는 삼성발 경제위기 가능성
 - 셋째, 중국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경기 대후퇴가 경제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 10대 동족재벌의 매출액 규모는 2003년 GDP 대비 50.6%에서 2012년에는 84.1%로 증가하였으며, 자산총액 비중은 2003년 GDP 대비 48.4%였으나 2012년에는 84%로 증가.



3.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길

노키아는 알고 있었다

- 노키아 경영진들은 **하이테크(high-tech) 산업**에서는 **기회의 창**을 인지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지를 아는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Leading companies have focused too deeply and for too long on being best in their chosen business area without focussing sufficient attention or funds on new growth areas or possible new technologies that may render existing technology obsolete.(선도 기업들은 선택된 사업영역에서 최고를 유지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다가 새로운 성장 영역이나 기존 기술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신기술들에 충분한 주의와 자금 투입을 소홀히 해왔다)
- 노키아는 기술혁신에 과감히 투자했다.
-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선구자였다.
- 노키아는 콘텐츠의 중요성도 알고 있었다.



노키아는 왜 몰락했나?

- **기득권**이 우선시 되었다.
 - 과거의 성공 전략(common platform, segmented marketing)이 혁신의 장애가 됨.
 - 심비안 OS
- 비대해지고 **관료화**되었다.
- 노키아의 몰락은 **창조적 파괴 과정**이었다.

삼성전자는 제2의 노키아?

■ 닮은 점과 다른 점

- 내외부적 성공요인: GSM v. CDMA, Ollila v. 이건희
- 부품 공급망 관리와 기업 조직
- R&D와 인수합병 전략
- 휴대폰 사업의 중요성
- 수직계열화
- 소유지배구조

■ 경제력집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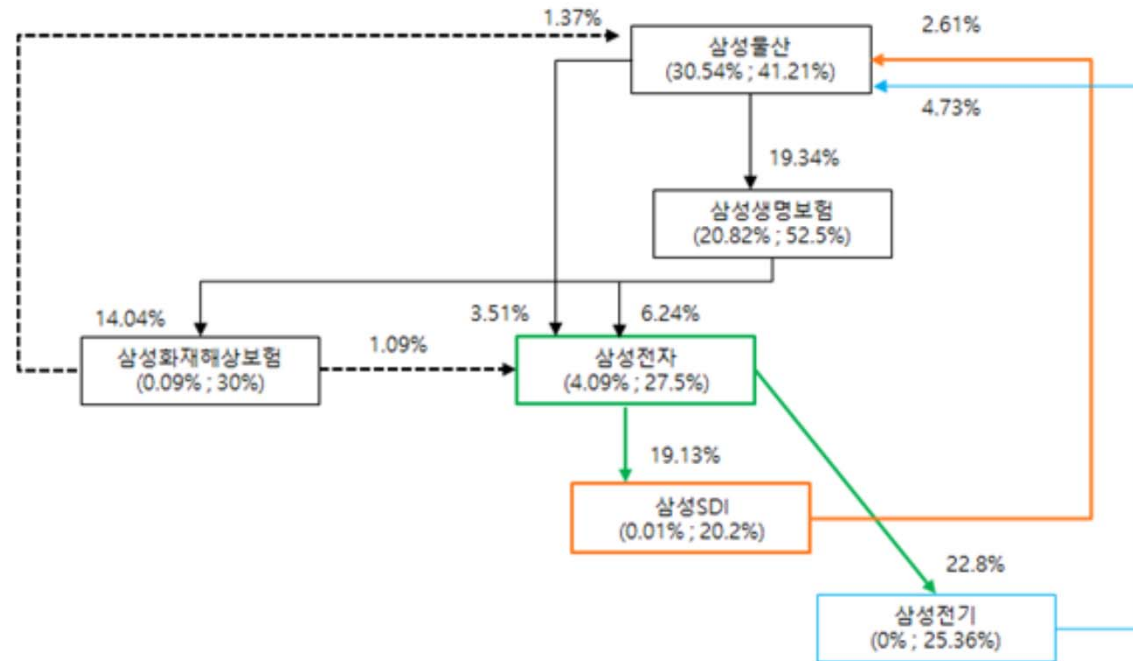
- 2000년에 노키아의 GDP 점유율은 4.0%였으나, 2013년 삼성그룹의 GDP 점유율은 4.7%
- 2000년에 노키아는 핀란드 수출의 20.7%를 차지했으나, 삼성그룹은 2012년에 한국 수출의 28%를 담당



삼성전자 몰락에 대한 예측

- 창조적 파괴의 가능성.
 - 창조적 파괴는 ICT 산업의 특징
-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
- 사업다각화: DS부문, 바이오시물러, 자동차 전장

삼성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2015년 10월 1일 현재)

삼성전자 위기의 전이

- 주가가 자본감소에 비례해 하락한다는 가정 하의 시뮬레이션
- 노키아가 몰락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1일 이후 2년 반 만에 노키아의 주가가 90% 이상 급락, 이후 반등해 매각협상 개시 기준으로 76% 하락

삼성전자 초기 주가 하락률 가정	최종 주가 하락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50%	60.6%	44.4%	40.3%
60%	73.6%	56.7%	50.7%
70%	87.3%	70.0%	63.2%
80%	99.5%	80.5%	69.6%

삼성 리스크

- 삼성전자의 몰락은 수직계열화된 전자 부문 계열사와 관련 하청기업들의 위기로 전이.
 -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하청기업들의 도산이 현실화될 때 실업률이 약 7.1% 포인트 증가
- 국민연금 기금과 국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식 금액은 약 18조 5,726억 원 (2015.06 기준)
 - 삼성그룹이 납부한 법인세는 4조 3,500억 원 (2014년)
-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도산으로 전이될 경우에 국내의 보험산업 자체가 위기
 - 2014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차입금은 약 11조 8,741억 원 (2014년 말 기준, 신한은행의 2014년 영업이익이 2조 6,548억 원, 자본총계가 30조 5,149억 원)
 - 삼성그룹의 상장사들이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

삼성리스크에 대비하자: 이스라엘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

- 2009-2010년에 이스라엘도 경제력 집중을 우려함.
 -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 재벌의 미디어 영향력.
 - 총수일가의 이해에 의해 의사결정의 왜곡
 - 여신제공 (credit allocation)의 왜곡
 - 터널링 (tunneling)
- 나아가, 피라미드 구조의 재벌의 몰락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진입 및 금융의 제약**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다면적 시장에서 담합**이 발생할 개연성과 **검증되지 않은 2세로 경영권 승계**를 우려함.
- **“The Committee on Increasing Competitiveness in the Economy”**를 구성해 경제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벌 개혁을 시행함.

삼성리스크에 대비하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

3대 이슈	주요 내용
기업소유지배구조	<p>“지주회사-자회사” 기업집단만 허용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향후 6년 안에 2층 구조로 축소. 새로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p>
금산분리	<p>주요 금융기관과 주요 비금융회사의 동시 보유 금지. (주요 금융기관은 자산이 400억 세켈를 초과하는 은행이 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 주요 비금융회사는 매출 또 는 부채가 60억 세켈 이상이거나 독점사업자로서 매출 또는 부채가 20억 세켈 이상인 비금융사)</p>
정 부 의 allocation of rights	<p>Concentrated entities의 민영화, 주요 공공입찰, 라이선스 획득 등에 참여 허용 여부를, the committee for the reduction of economic-wide concentration가 해당 정부기관에 권고.</p>



4.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정의

➤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다음과 같은 체제임.

-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 최소한의 인격적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된,
-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 억제)



정부 역할의 대전환: 시장경제체제 확립

- **관치금융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의 폐기가 필요.**
 - **특수은행**을 통한 관치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지대추구 행위 근절
 - **R&D 정책**으로 포장된 정부주도 산업정책 폐기.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
-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의 실질적 보호.**
 - **punitive damage** 도입.
 - 손해배상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 보수 제한 완화.**
 - 입증책임의 재정립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정부 역할의 대전환: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확립

-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의 구비.
 - 혁신가가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사회복지 및 실업보험 제도가 필요. (동아일보의 창업의 걸림돌 설문에서, 재기의 어려움이 65.5%로 가장 높음)
 - 사회통합은 체제의 안전성을 높이는 외부성을 지닌 사회적 투자임.
-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기업 연금의 강화**가 필요.
 - 연금제도의 강화로 재정 부담 증가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불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을 폐지하고, 또 필요한 경우 연금 분담금 및 조세 부담 증가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연금제도 강화가 노인빈곤이나 자영업 몰락을 방지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 역시 고려해야만 함.
- **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필요.





감사합니다

